

「 2022년 1월 15일 시행 」

##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 【인문사회계열 : 필수과목】

제 1 과목	제 2 과목	제 3 과목
헌 법	한 국 사	행 정 법

####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지 표지에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의 “과목순서”, “페이지 수량”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문제풀이 바랍니다. ※ 본 시험지는 총 30페이지입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 본 시험지는 공개이므로 시험이 종료된 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소방청**



# 【 헌 법 】

1.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③ 4·19민주이념
- ④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 ⑤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2. 헌법 제28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그 구제를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③ 형사보상청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무죄재판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이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④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에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 28조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3. 헌법상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최할 수 없다.
- ②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③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국회의 내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로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5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에서 토론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5.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한다.
- ②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적, 권리내용을 규범 상대방에게 요구할 힘이 있고 그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③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 ④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란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 ⑤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 문제이고 생존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외국인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6. 정당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 ②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④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7.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직업선택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 ②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 ③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국내에서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대여행위의 동기, 과정 및 피해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건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⑤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을 당연 퇴직되도록 한 법률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할 수 없다.

9.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은 제외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③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 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10. 헌법 제1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는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⑤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영장주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된다.

11. 코로나19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무총리가 확진자 중 증세가 있는 확진자의 비율을 파악하지 않고 감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확진자의 수를 기준으로 방역단계를 설정하는 등 직무유기하여 헌법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② 서울특별시립 지원센터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센터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③ 코로나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회용 마스크를 미지급하는 교도소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며칠 만에 인간의 면역력에 의해 자연치유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위험한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려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 ⑤ 서울특별시립 지원센터에서 시설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수 초간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헌법상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④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⑤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 헌법상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 ② 입법자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어느 정도로 구속되는가는 그 규율대상과 차별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 ③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기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해야 한다.
- ④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 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4. 헌법상 정족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⑤ 국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5.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③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명령이 발하여진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한다.
- ④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 ①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으로 하는 것
- ② 국회 부의장을 1인으로 하는 것
- ③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30세로 낮추는 것
- ④ 감사원의 감사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는 것
- 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5년으로 하는 것

17.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 ②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8.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②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지만,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③ 열 손가락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은 국가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한다거나 그 윤리적 판단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운전 중의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⑤ 의사가 환자의 신병(身病)에 관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리도록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19.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만이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더라도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 ④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20.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②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④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 ⑤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1.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고 합헌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는 알 권리 및 의사공개원칙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2.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는 교육감과 지방의회 상호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도 포함된다.
- ③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23.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특별사면의 효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다.
- ④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24.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②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 ③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와 법질서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국법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복종을 그 존립의 전제로 하고 있다.
- ④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25.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집회의 자유는 다수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 ②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하며,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집회의 자유는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 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 【 한국사 】

1.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백제의 장수 윤충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나)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 ① 온달 장군이 아차산성을 공략하였다.
- ② 신라는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③ 백제는 칠지도를 만들어 왜에 보냈다.
- ④ 왜의 지원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하였다.
- ⑤ 백제가 익산 지역으로 천도를 추진하였다.

2.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전」과 「형전」은 이미 간행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네 가지 법전은 미처 교정을 다 마치지 못하였는데, (가)께서 갑자기 승하하신 이후에 ... (중략) ... 마침내 금상께서 하시던 일을 마무리 하시어 완성된 법전을 나라 안에 반포하셨다.

- ①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② 진관체제를 실시하였다.
- ③ 삼포왜란을 진압하였다.
- ④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 ⑤ 부민고소금지법을 신설하였다.

3. 다음 글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自強)의 여하에 있을 따름이다. 우리 대한이 종전에는 자강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인민이 스스로 우매함에 묶여 있고 국력이 쇠퇴하여 마침내 오늘의 위기에 처하였고, 결국 외국인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자강의 도(道)에 뜻을 다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 (중략) ... 한편 자강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니라 교육의 진작과 식산 흥업에 있다.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못하면 백성의 지혜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산업이 늘지 못하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한다.

- ① 자치 운동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 ② 국채 보상 운동의 참여를 결의하였다.
- ③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일제에 제출하였다.
- ④ 농광회사를 설립하여 경제 침탈에 맞섰다.
- ⑤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반대하였다.

4.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안 감사가 보고하기를, “대동강에 정박한 이양선이 더욱 방자히 날뛰며 대포와 총을 쏘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승리할 방법은 화공(火攻)보다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일제히 불을 질러 그 배를 불태워버렸습니다.”라고 하였다.  
 - 『승정원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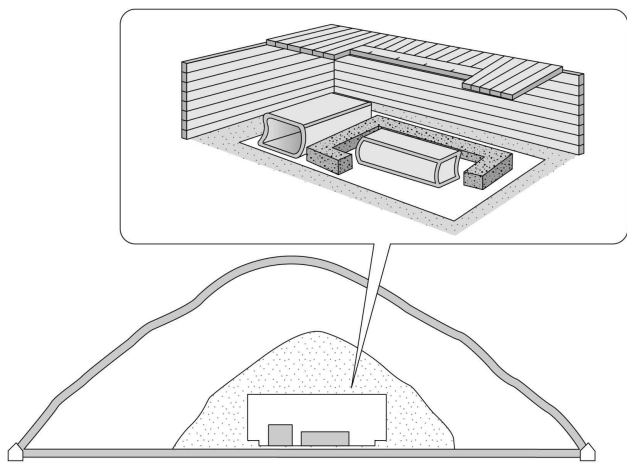
- ①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되었다.
- ② 윤요호가 영종도 일대에 출몰하였다.
- ③ 강화도의 외규장각 도서관이 약탈당하였다.
- ④ 천주교도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벌어졌다.
- ⑤ 어재연의 부대가 광성보 전투에서 항전하였다.

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부군현(州府郡縣)에는 대부분 지역 토착민 가운데 같은 성씨를 가진 유력 집단인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 출신 가운데 도성에 살면서 관직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향에 거주하는 토성 중에서 강직하고 명석한 자들을 선택하여 (가)에 두고 간사한 관리의 범법 행위를 조사하고 살피는 등 풍속을 바로 잡았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 ①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 ② 임기제와 상피제가 엄격히 적용되었다.
- ③ 부호장을 임명하고 행정 전반을 총괄하였다.
- ④ 인재를 모아 교육하고 이름난 선비를 추모하였다.
- ⑤ 전통적 농민 조직에 유교 윤리가 가미되어 만들어졌다.

6. 다음 구조의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구려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 ②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 ③ 무덤 속에 벽화가 그려진 경우가 많았다.
- ④ 도굴이 어려워 꺼묻거리가 많이 발견되었다.
- ⑤ 백제 초기의 무덤 양식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7. 밑줄 친 ㉠이 시행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도성 주변에 사는 자들은 모두 같은 국가의 백성이니, 행상과 좌관의 물품이 있고 없는 것을 매매하는 것은 떳떳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전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여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어 도성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이도 저도 모두 백성인데 마땅히 ㉠왕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 ① 금위영이 설치되어 5군영 체제가 갖춰졌다.
- ② 청에 대한 반발로 북벌 정책이 시작되었다.
- ③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였다.
- ④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노론이 정권을 차지하였다.
- ⑤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고 예송이 촉발되었다.

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가)은/는 작은 사건이 아니므로, 대일본 대황제는 심사숙고하여 특별히 이노우에 가오루 백작을 대조선국에 전권대사로 파견하여 편리한 대로 처리하도록 하며, 대조선국 대군주는 양국의 돈독한 우호를 진심으로 염원하여 김홍집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토의·처리하도록 임명하고 지난 일을 교훈으로 삼아 후일의 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양국의 대신은 서로 마음을 합해 상의하여 아래의 약관을 만들어 우의가 완전하다는 것을 밝히며, 또한 이로써 장래 사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 ① 을미의병이 봉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 ② 텐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③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 ④ 흥선 대원군이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였다.
- ⑤ 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9. (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야인사들이 명동 성당에 모여 **(가)** 체제를 비판하며 '3·1 민주 구국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

- ①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 ② 국민 교육 헌장이 선포되었다.
- ③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 ④ 긴급 조치가 잇달아 공포되었다.
- 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에는 군왕이 있으며 가축의 이름으로 벼슬 이름을 부르고 있다. 마가·우가·저가·구가·태사·태사자·사자 등이 있다. 읍락에는 호민이 있으며 하호는 모두 노복과 같이 여겼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 **(나)**에는 대군왕이 없고, 후·읍군·삼로 등의 관직이 있어 하호를 통치하였다. ... (중략) ... 그 풍속은 산천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 ① (가):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행해졌다.
- ② (가):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 ③ (나): 일본에 철을 수출하였다.
- ④ (나):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는 소도가 있었다.
- ⑤ (가), (나):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로 발전하였다.

11. 밑줄 친 '왕'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정방의 설치는 권신의 손에서 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사람을 조정에서 벼슬을 시키는 본뜻이겠는가? 이제 이를 영구히 폐지하니, 3품관 이하는 재상과 함께 올리고 내릴 것을 토의할 것이요, 7품관 이하는 이부와 병부에서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 ① 서방이 설치되었다.
- ② 조위총의 난이 일어났다.
- ③ 과전법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 ④ 관리를 대상으로 한 문신율과법이 시행되었다.
- ⑤ 수도가 함락되어 왕이 복주 지역으로 피신하였다.

12. 밑줄 친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규홍이 아뢰기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백성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이제는 수만 호에 십여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번에 이범윤을 파견하여 황제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 (중략) ... 이범윤을 이곳에 계속 주재시키면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① 서전서숙에서 민족 교육이 실시되었다.
- ② 최팔용의 조선 청년 독립단이 결성되었다.
- ③ 조소앙 등이 대동단결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④ 의병과 계몽 운동가들이 권업회를 조직하였다.
- ⑤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 군단을 만들어 군사 훈련을 하였다.

13.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말하기를, “혹자는 [가] 을/를 가리켜 당(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로 어찌 나의 뜻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아! 참으로 군자라면 당이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당이 적을 까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나 역시 주희의 설을 본받아 [가] 와/과 성혼의 당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 ① 가례집람을 집필하였다.
- ②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 ③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 ④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 ⑤ 인물성이론을 정립하였다.

14.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남북 협상을 위해 38도선을 넘었다.  
 (나)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다) 임시 정부의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최장 5년 간의 신탁 통치를 거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것이 결의되었다.  
 (마) 여운형 등 중도 세력은 미 군정의 지원을 바탕으로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① (다)–(나)–(가)–(마)–(라)
- ② (다)–(라)–(마)–(가)–(나)
- ③ (라)–(다)–(마)–(가)–(나)
- ④ (라)–(다)–(가)–(마)–(나)
- ⑤ (라)–(나)–(다)–(가)–(마)

15. (가) 시기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오니, 왕이 듣고 패하강변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오는 것을 기다려 갑자기 쳐서 격퇴하였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병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의 왕이 이들의 공격을 막다가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다.

↓

[가]

↓

호태왕(好太王)은 친히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중략)… 백제의 왕은 남녀 포로 천여 명과 세포 천 필을 바치고, 무릎을 꿇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① 나제 동맹이 체결되었다.
- ②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③ 고구려는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 ④ 고구려는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⑤ 백제는 관등제를 도입하고 관리의 복색을 정하였다.



1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상에서는 동명왕(東明王)의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말하니, 비록 시골의 어리석은 남녀들도 자못 그 일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내가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선사(先師) 공자께서는 괴력난신(怪力亂神)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 …(중략)… 지난 계축년 4월에 (가)을/를 얻어 동명왕본기(東明王本紀)를 보니 그 신이 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여 귀신이나 환상으로만 여겼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상이 아니고 성스러움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國史)는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함부로 전하였겠는가.

- ① 삼국사기      ② 동국통감      ③ 제왕운기
- ④ 구삼국사      ⑤ 칠대실록

17. (가), (나)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때 남적(南賊)이 봉기하였는데 그중 심한 것이 운문에 웅거한 김사미와 초전에 자리 잡은 효심이였다. 이들은 망명한 무리를 불러 모아 주현을 노략질하였다. 왕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걱정하였다.

(나) 수만 명이 무리를 지어 읍내에 모여 이서·이방과 하급 관리들의 집 수십 호를 불태웠는데, 그 행동거지가 가볍지 않았다. 당시 병마절도사가 나서 이들을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유계춘의 지휘 아래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횡령한 조목, 그리고 아전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일들을 여러 번 문책하였는데, 그 능멸하고 핍박함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 ① (가): 후삼국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
- ② (가): 노비들이 주도한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
- ③ (나): 교조 신원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④ (나): 평안도 일부 지역이 봉기 세력에 점령되었다.
- ⑤ (나): 안핵사 박규수의 삼정이정청 설치 건의로 이어졌다.

18. 다음 기구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좌사정·우사정 각 1명이 좌평장사·우평장사의 아래에 있는데, 복야와 비슷하며 좌윤·우윤은 이승과 비슷하다. 좌육사에는 충부·인부·의부에 각 1명의 경이 사정의 아래에 두어져 있다. 지사인 작부·창부·선부에는 부마다 낭중과 원외가 있다. 우육사에는 지부·예부·신부와 지사인 응부·계부·수부가 있는데, 경과 낭은 좌에 준하니 육관과 비슷하다.

- ①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②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정부를 설치하였다.
- ③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을 도읍으로 삼았다.
- ④ 지방 세력 견제를 위해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19. 다음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장차 내고·상적창·도염원·안국사 및 여러 궁원과 사사가 소유한 염분을 모두 관에 납입시키도록 하라. 또한 가격은 은 1근에 64석, 은 1냥에 4석, 포 1필에 2석으로 하여 이것으로 규정을 삼도록 하라. 그리하여 소금을 쓰는 자는 모두의 염창에 가서 사도록 하고, 군현의 사람들은 모두 본관의 관사에 나아가 포를 바치고 소금을 받도록 하라. 만약 사사로이 염분을 설치하거나 몰래 서로 무역하는 자가 있으면 엄히 죄로 다스려라.

- ① 전농사가 운영되었다.
- ② 민정 문서가 3년마다 작성되었다.
- ③ 흑창을 통해 빈민 구제 정책이 실시되었다.
- ④ 양반에게 군포를 거두는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 ⑤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로 도조법이 등장하였다.

20. (가) 학교가 운영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새로 설립된 학교를 □(가)□(이)라 부른다. 내무부 수문사 당상이 관할하며 별도로 주사를 정해 해당 당상의 명령에 따라 사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당상은 하루건너 사직하며 주사는 매일 출근하게 한다.
- 성품이 선량하고 재간 있으며 총명한 외국인 3명을 □(가)□(으)로 초빙하여 '교사'라고 부를 것이며 가르치는 일을 전적으로 맡도록 한다. 그리고 외국의 말과 글을 이미 배워 잘 아는 사람을 따로 선발하여 교사가 명령하는 대로 적당하게 학도를 가르치는 것을 도와주는 자를 '교습'이라고 부른다. 또한 각종 과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연습하여 본 학업을 넓히도록 한다.

- ①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 ② 대동상회가 설립되었다.
- ③ 국문 연구소가 설치되었다.
- ④ 대한매일신보가 발간되었다.
- ⑤ 함경도에서 방곡령이 반포되었다.

21.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상황으로 옳은 것은?

- (가) 경제 자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 제철소가 이번 3일에 국내 최초로 준공되었다. ... (중략) ... 이 종합 제철소는 10개 공장과 12개 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철강 제품들을 생산하기까지 일관된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다.
- (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가입 동의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비준한 뒤 관례에 따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본부가 있는 프랑스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하면 발효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비준과 가입서 전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려면 약 1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국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은 12월 하순쯤에 완료될 전망이다.

- ① (가):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② (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이 나타났다.
- ③ (나): 제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여 국내 경제가 침체되었다.
- ④ (나): 세계 무역 기구(WTO)의 주도하에 시장 개방 압력이 심화되었다.
- ⑤ (나): 농어촌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 주도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22. (가), (나) 시기 사이에 편찬된 서적으로 옳은 것은?

- (가) 몽골군이 침략하자, 조정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 (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진 『직지』가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되었다.

- ① 동문선
- ② 균여전
- ③ 삼국유사
- ④ 불씨잡변
- ⑤ 선화봉사고려도경

23.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진나라의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이에 왕은 사신을 보내 답례하고 토산물을 바치도록 하였다.  
 (나) 대업 9년에 양제가 친정을 단행하였다. 이때 모든 군대에게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각자 길을 나누어 성들을 공격하니 적의 군세는 날로 위축되었다.

—<보 기>—

- ㄱ. 단양 적성비가 건립되었다.
- ㄴ. 무령왕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ㄷ. 관구검의 공격으로 수도가 함락되었다.
- ㄹ.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4. 다음 합의문의 결과로 옳은 것은?

**합의문**

-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등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② 개성 공단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 ③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④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처음으로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 ⑤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이 제시되었다.

25.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회는 몇 달 전 3월 15일에 실시된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보 기>—

- ㄱ.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 ㄴ.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 ㄷ.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성되었다.
- ㄹ.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단행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 행정 법 】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가 표명되었다는 사실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②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관할 관청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행정청이 착오로 인하여 국적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행위를 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이 처리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이러한 주민등록말소를 통하여 자신의 국적이탈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립공원 인근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관련 토지를 매수하는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해당 토지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하면,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가처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②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④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부정수급액)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⑤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해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 명의로 완납한 경우,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수한 성격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③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 ⑤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당연히 무효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하여야지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법규명령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 ③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③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 ④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되어 군부대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 병역처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입영한 때부터 현역의 군인으로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⑤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

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부관은 철회권의 유보이다.
- ②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③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 ④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도 효력이 확정되므로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별도로 다룰 수 없다.
- ⑤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을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7.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는데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철회를 할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③ 행정행위의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 ④ 영업허가의 철회 당시 상대방이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유제시의 생략 사유가 아니다.
- 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8.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이에 따라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신청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 ②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 ⑤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9.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변경 또는 조정 고시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변경고시는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③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행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그 성질상 당사자의 사전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으로서 퇴직연금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 고시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폐공의 약속 등 사유가 있으면 의견청취절차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10.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그리고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한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이 정책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라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때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정책등을 예고하여야 한다.
- ④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더라도 행정청은 예고를 하여야 한다.



11.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 권리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함께 가진다.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 절차 등의 내용에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④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보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⑤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가치가 있는 경우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된다.

12.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③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무조사가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 ④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⑤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 ②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 ④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은 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⑤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법령상의 책임자로 규정된 자가 아닌 현실적 행위자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의 경우 얼마로 할 것인지를 재량이 부여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설령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⑤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을 통해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15.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 ②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게 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16.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철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 ②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 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 ③ 「건축법」에 위반하여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려운 사정만 있으면 충분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주장·입증책임은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 ④ 법령에 규정된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 비록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으로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 ⑤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그 목적을 달리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므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계고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

1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준공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현저히 지연시켰고 그러한 지연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③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다른 법률상 보상청구권이 시효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해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나 단순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가 부정된다.
- ⑤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게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는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가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에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고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자 비로소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 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들만으로 바로 특수임무수행자 중에서 보상금 등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 ③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대상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이다.
-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 다음 <보기>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ㄴ. 군의관이 수행하는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그에 따라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ㄷ.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로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동일한 결론의 재심사통보를 받았다면, 그 재심사통보는 단순히 업무처리의 적정 및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ㄹ.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통보는 해당 요양기관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ㅂ.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피해자 등에게 진실규명 신청권 및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이 부여되고, 그 결정에서 규명된 진실에 따라 국가가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① ㄱ, ㄷ, ㅁ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 ④ ㄴ, ㄷ, ㅂ      ⑤ ㄹ, ㅁ, ㅂ

2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가 처분을 받지 못한 대학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다른 대학에 대하여 이루어진 설치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② 콘크리트제조업종의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지상에 묘소를 두고 있는 자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이익은 그 입지지정승인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인근 주민들이 더 나아가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④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부 중복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⑤ 토사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상의 이익은 토사채취허가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22. 항고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등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으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 ③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고 별도의 취소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이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 ⑤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지만 당초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례를 통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퇴직한 경우에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없거나 위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 소는 부적법하다.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준용하여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며,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④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란 처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기속행위에만 인정되고, 처분의 가부, 선택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는 재량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국회의원에게는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대사의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4.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피대리 행정청에 있다.
- ②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입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③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입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④ 행정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등기, 소송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촉탁은 행정청의 권한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 ⑤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상실하고 그 사항은 수입청의 권한으로 되고 항고소송에서 수입청이 피고가 된다.

25. 공물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일반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③ 원래 일반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일반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해수욕장의 백사장을 어선업자들이 어선을 양육·정박시키거나 어구의 수리·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위 백사장을 통과하는 해변도로가 개설되고 녹지공간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반사용이 제한된다면 이러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 ⑤ 보존재산인 국유임야를 매각할 당시 처분권한이 없던 세무서장이 보존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존재산인 국유임야에 대한 묵시적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